

의안 번호	1379	【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 A호)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】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6. 30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
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7. 3.(월)  
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7. 13.(목)

## 2. 제안이유

- 가. 우정동주민센터는 4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주민편의 공간의 부족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
 나. 해당 공공청사를 신축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규 모  
 1) 결정면적: A=1,119.0㎡  
 2) 건축개요: 지상4층, 연면적 1,485.25㎡, 건축면적 473.5㎡  
 나. 위 치: 당산5길 49-4(우정동) 일원  
 다. 사 업 비: 6,286,353천원(보상3,936,100 공사2,350,253)  
 라. 추진사항: 주민 의견청취  
 1) 열람기간: 2017. 6. 20. ~ 2017. 7. 3(14일간)  
 2) 주민의견: 1건

제출의견	사업부서 (총무과) 의견	검토결과
○ 제출자 : 김○○ ○ 주요내용 : 2016년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해제된 부지로 주민센터건립 대상지를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선정하여 개인 재산권 보호 요청	주민센터 건립은 공익 사업으로 정상추진	미반영

## 4. 근거법규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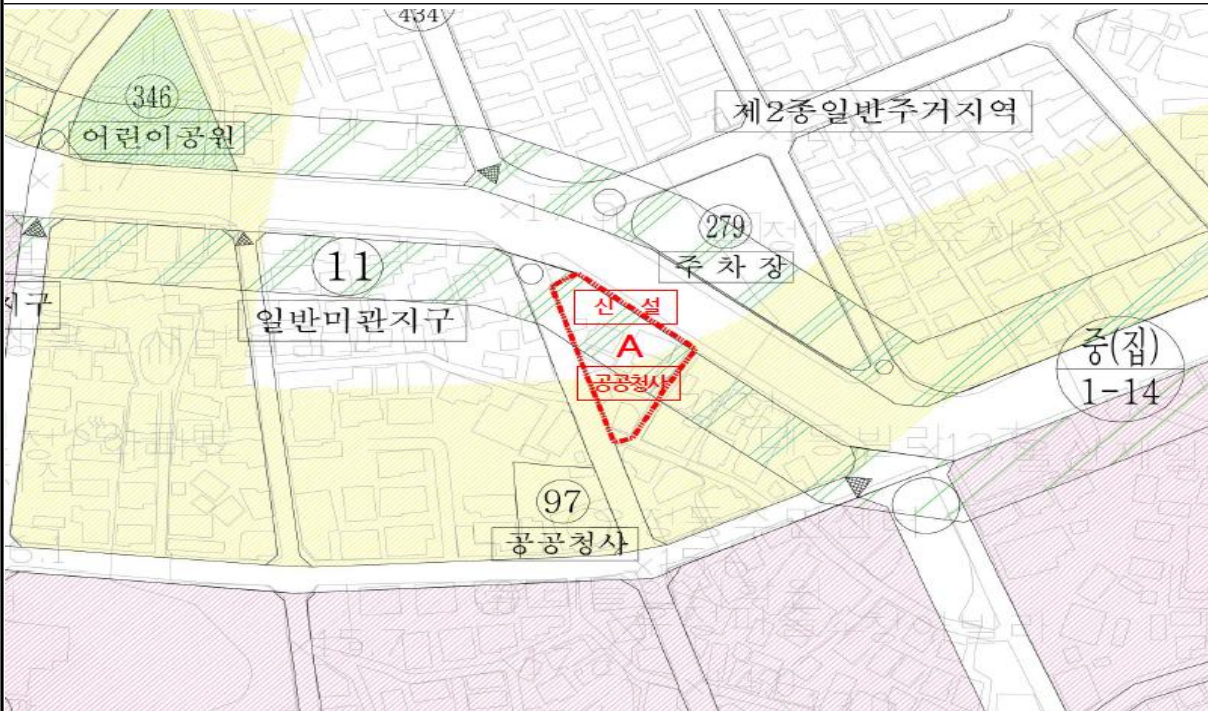
## 5. 검토의견

- 우정동주민센터는 1976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낡고 노후된 시설로 공간협소와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, 당산5길 49-4일원에 신축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것으로,  
 ○ 주민이용의 편의성 제고와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됨.

【붙임】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



위치도(당산5길 49-4(우정동) 일원)



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 A) 결정 안

## 근거법규

###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**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** ① 국토교통부장관(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(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)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4.14., 2013.3.23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히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., 2013.3.23.>

③ 제2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., 2013.3.23.>

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1.4.14., 2013.3.23.>

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민"은 "지방의회"로 본다. <개정 2013.3.23.>

⑦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히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.>